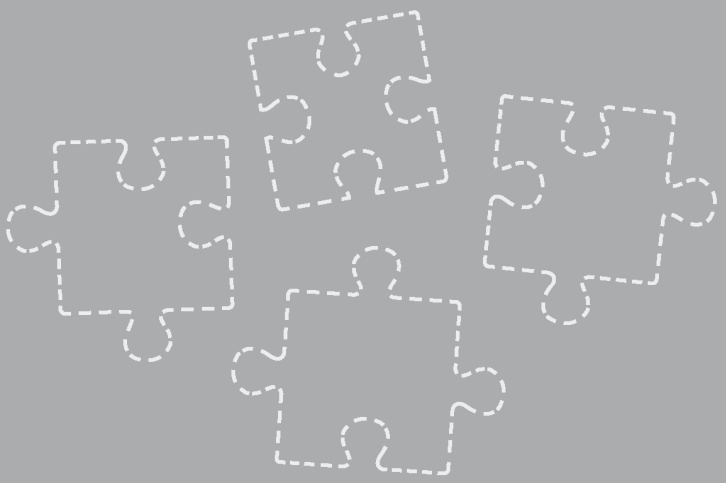
정책자료 2022-01

청렴韓세상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안서연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목 차 | Contents

Ⅰ. 연구의 배경, 목적 및 구성 ····· 1

Ⅱ.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구성과 빈곤 실태 ····· 5

1. 연구방법 ····· 5
2. 분석결과 ····· 6
   1) 연도별·노인연령대별 빈곤율과 빈곤갭 ····· 7
   2) 연도별·노인연령대별 중위소득과 빈곤선 추이 ····· 8
   3) 연도별 노인연령별 소득구성 ····· 12
   4) 빈곤여부에 따른 소득 구성 비율과 소득 수준 ····· 16
   5) 기초연금 수급과 빈곤의 관계 ····· 22

Ⅲ. OECD 국가 노인의 소득구성과 빈곤차이 분해 ····· 27

1. 데이터 소개 ····· 27
2. 분석전략 및 분석방법 ····· 29
3. 분석결과 ····· 32
   1) OECD 국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및 소득 수준 ····· 32
   2) OECD 주요국의 소득 구성 ····· 35
   3) OECD 주요국의 빈곤율 분해 결과 ····· 37

Ⅵ. 사회보장제도 정책효과 분석 ····· 41

1. 소득원천별 빈곤지수 분해 방법 ····· 41
2. 분석 결과 ····· 42
   1) 각 연도별 빈곤지수 분해 결과 ····· 42
   2) 두 시점별 빈곤지수 분해 결과 ····· 44

Ⅴ. 결 론 ····· 51
1. 요 약 ····· 51
2. 정책적 함의 ····· 56

참고문헌 ····· 59

표차례

〈표 Ⅰ-1〉 2011-2020년 노인빈곤율 ····· 2

〈표 Ⅱ-1〉 노인연령대별 빈곤율과 빈곤갭 ····· 8
〈표 Ⅱ-2〉 연도별 중위소득과 빈곤선 추이 ····· 9
〈표 Ⅱ-3〉 노인연령별 중위소득 추이 ····· 10
〈표 Ⅱ-4〉 핵심생산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수준 ····· 11
〈표 Ⅱ-5〉 65-74세 소득구성 추이 ····· 15
〈표 Ⅱ-6〉 75-84세 소득구성 추이 ····· 15
〈표 Ⅱ-7〉 85세 이상 소득구성 추이 ····· 16
〈표 Ⅱ-8〉 65세 이상 비빈곤 노인 소득 구성 ····· 18
〈표 Ⅱ-9〉 65세 이상 빈곤 노인 소득 구성 ····· 18
〈표 Ⅱ-10〉 비빈곤 노인의 각 소득 요소별 평균액 ····· 20
〈표 Ⅱ-11〉 빈곤 노인의 각 소득 요소별 평균액 ····· 21
〈표 Ⅱ-12〉 빈곤여부와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집단별 비율 ····· 23
〈표 Ⅱ-13〉 빈곤여부와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집단별 총자산 평균 ····· 24
〈표 Ⅱ-14〉 빈곤여부와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처분균등화 소득 평균 ····· 25

〈표 Ⅲ-1〉 중고령자 빈곤율 차이 분해를 위한 변수의 설정 ····· 31
〈표 Ⅲ-2〉 한국과 OECD 비교대상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차이 분해 결과 ····· 40

〈표 Ⅳ-1〉 연도별 소득원천별 빈곤율 분해 결과 ····· 43
〈표 Ⅳ-2〉 연도별 소득원천별 빈곤갭 분해 결과 ····· 44
〈표 Ⅳ-3〉 두 시점 사이의 빈곤율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 ····· 45
〈표 Ⅳ-4〉 두 시점 사이의 빈곤갭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 ····· 46
〈표 Ⅳ-5〉 두 시점 사이의 빈곤율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 ····· 48
〈표 Ⅳ-6〉 두 시점 사이의 빈곤갭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 ····· 49

그림차례

[그림 Ⅱ-1] 65세 이상 노인 전체 소득구성비율 ····· 13

[그림 Ⅲ-1] OECD 주요국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 33
[그림 Ⅲ-2] OECD 주요국 65세 이상 노인평균 소득 (단위: USD 2017) ····· 34
[그림 Ⅲ-3] 핵심생산인구 대비 노인의 평균/중위소득 수준(%) ····· 35
[그림 Ⅲ-4] OECD 주요국 소득구성 ····· 37

Ⅰ. 연구의 배경, 목적 및 구성

❑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음

○ 현 노인세대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를 경험하며,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연금소득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음.

-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소득구성 중 노동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OECD, 2012).
-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소득이 현저히 줄어드는 노인세대의 소득빈곤율이 높은 것은 필연적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기준으로 볼 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 개선의 추세가 뚜렷함.

- 노인빈곤율 실태에 대한 1차적 분석자료는 다수 존재하나, 제도적 요소와 노인빈곤율 간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자료는 부족.

○ 우리나라 빈곤율 산출의 공식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1년과 2020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 46.5%에서 2020년 38.9%로 7.6%p 큰 폭으로 감소함.

- 같은 기간 전체 인구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0년 15.3%로 3.3%p 감소로 노인빈곤율 감소폭 보다 낮음.
- 노인빈곤율의 한가지 특징은 2012년과 2020년 사이 시장소득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임.
- 즉 2012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5.4%에서 2020년 58.6%로 증가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 빈곤율과의 격차는 2012년 10%p에서 2020년 19.7%p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정리하자면 노인빈곤율은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전체인구 빈곤율보다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의 빈곤율은 38.9%로 30%대에 들어섬.

- 또한 시장소득 빈곤율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표 Ⅰ-1〉 2011-2020년 노인빈곤율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빈곤율[1)]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15.3
노인 빈곤율[2)]	46.5	45.4	46.3	44.5	43.2	43.6	42.3	42.0	41.4	38.9
노인 빈곤율[3)]	56.9	55.4	55.7	55.9	56.6	57.5	56.7	58.5	59.0	58.6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1)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임.
2)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3) 시장소득 기준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첫째,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노인 소득 분포와 빈곤 실태가 어떤 양상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 둘째, OECD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 수준과 구성을 비교함.

○ 셋째,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어떤 요인 차이에 의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지 실증 분석 하고,

○ 마지막으로 2011년과 2020년간 확대된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빈곤 효과가 어떤 수준인지 평가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실태분석) 노인빈곤율 추이, 소득구성의 수준과 특성 분석

○ (국가 간 비교 분석) 노인의 소득구성과 수준에 관한 OECD 국가 간 비교 분석

○ (원인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원인 분석

○ (정책효과 분석)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 분석

Ⅱ.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구성과 빈곤 실태

1. 연구방법

○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자료를 사용하여 2012년(소득년도 기준 2011년)부터 2021년(소득년도 기준 2020년)까지 노인의 소득수준 및 빈곤 실태를 분석함.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우리나라 공식 소득분배 지표 및 OECD 소득분배 지표 통계 작성 시 사용되는 자료임.

○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는 농가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자료로써, 2022년 현재 조사기준 년도 2012년에서 2021년 자료까지 공개되었음.

- 가금복 자료는 2016년 조사데이터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로 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음.
- 대부분의 소득조사에서 소득의 과소보고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행정자료 보완을 통해 소득자료의 대표성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2016년 이전과 이후 자료의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여 직접 비교 시 주의해야 함.
- 가금복의 소득 관련 자료는 조사 연도(t년도) 4월 기준, 전년도(t-1)의 연간 기준(1.1~12.31)으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의 자료는 행정자료로 대체·보완하였음.
- 가금복 자료에서 가구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됨. 가구주의 개념은 조사기준일 현재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며, 가구원의 개념은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으로 정의됨.

- 가구와 가구원 개념 정의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원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같은 거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 그리고 학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미혼 자녀 등을 포함하며, 현역군인 등으로 입대한 가족 및 시설에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족 및 함께 살고 있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동거인은 제외함(통계청, 2020).

2. 분석결과

○ 모든 분석에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소득과 자산은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20년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값을 제시함.

○ 또한 연도 표기시 조사년도(t년도)가 아닌 소득조사 시점(t-1)을 기준으로 제시함.

○ 가처분소득 기준이며,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함.

○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된 균등화한 중위소득을 도출하였으며,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 수준임.

○ 빈곤갭은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과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차이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서, 하위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빈곱갭의 값은 커짐(통계청 홈페이지).

- 즉 빈곤선 아래 속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 그 부족한 소득의 정도를 나타낸 값을 의미함

1) 연도별·노인연령대별 빈곤율과 빈곤갭

○ 노인연령대별 빈곤율과 빈곤갭은 아래의 〈표 Ⅱ-1〉과 같음.

-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49.18%[1]에서 38.97%까지 10.21%p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0%대에 진입함.
- 비슷하게 빈곤갭 또한 21.06%에서 12.48%로 8.58%p 감소하여 빈곤율 감소폭 보다 작았지만, 큰 폭 감소함.
- 노인집단 안에서도 빈곤율 감소는 다른 양상을 보임. 2011년과 2020년 9년 동안 노인연령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연소노인인 65세와 74세 노인의 빈곤율 감소가 15.15%p로 가장 컸으며, 75-84세 노인의 빈곤율은 7.90%p 감소함. 그러나 8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오히려 6.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5-74세 연소노인의 빈곤율은 2020년 30% 미만으로 떨어짐.
- 또한 노인연령별 빈곤율에서 2017년까지는 85세 고령노인 빈곤율보다 75-84세의 빈곤율이 더 높았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역전되어 85세 고령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갭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에서 감소를 보였는데, 75-84세가 빈곤갭 감소가 9.96%p로 65-74세 연소노인의 빈곤갭 9.93%p 감소보다 약간 컸으며, 85세 이상 노인의 빈곤갭 감소는 3.16%p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증가한 반면, 빈곤갭이 감소한 것으로 미뤄볼 때, 빈곤선의 빠른 증가로 인해 빈곤율의 8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 감소는 더디지만, 상대적인 소득수준(가처분 소득기준)은 빈곤선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1) 앞서 〈표 Ⅰ-1〉과 노인빈곤율 수치가 다른 이유는 통계청 공식 빈곤율의 경우 2011년 소득자료부터 행정자료로 보완된 자료로 산출된 결과이며, 저자가 분석한 가금복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 2016년부터 소득자료가 행정자료로 보완된 자료임.

〈표 Ⅱ-1〉 노인연령대별 빈곤율과 빈곤갭

(단위: %, %p)

연도	65세 이상		65-74		75-84		85세 이상	
	빈곤율	빈곤갭	빈곤율	빈곤갭	빈곤율	빈곤갭	빈곤율	빈곤갭
2011	49.18	21.06	44.59	17.84	58.23	26.66	48.23	24.16
2012	48.67	21.57	43.73	17.92	57.70	27.55	48.77	24.86
2013	48.39	21.74	42.90	17.62	58.21	28.33	47.83	24.56
2014	46.98	20.93	40.35	16.59	58.45	27.90	47.14	23.31
2015	46.73	19.84	38.86	15.14	59.68	27.09	47.76	22.57
2016	43.62	17.36	33.86	11.91	57.75	24.62	52.58	25.16
2017	42.31	16.83	32.39	11.09	55.61	23.77	52.73	26.47
2018	42.05	15.72	32.23	10.55	54.28	21.81	55.70	24.50
2019	41.42	14.63	30.41	9.49	54.77	20.21	56.63	24.60
2020	38.97	12.48	29.43	8.45	50.34	16.71	54.31	21.00
빈곤 차이	-10.21	-8.58	-15.15	-9.39	-7.90	-9.96	6.08	-3.1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연도별·노인연령대별 중위소득과 빈곤선 추이

○ 연도별 중위소득과 빈곤선 추이는 아래의 〈표 Ⅱ-2〉와 같음.

- 노인연령별 빈곤율의 상이한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 중위소득과 빈곤선 추이를 살펴보면, 중위소득은 2011년 2,127만원에서 2020년 2,999만원으로 대략 872.7만원 가량 증가하여 연간 3.94%p 증가하였음.
- 중위소득의 50%로 정의된 빈곤선은 2011년 1,063만원(월88.6만원)에서 2020년 1,499.7만원(월 대략 125만원)으로 증가함.
- 2015년과 2016년 사이 소득항목이 조사에서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됨에 따라 소득분포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중위소득과 빈곤선이 전년대비 12.23%로 큰 폭 증가함.

- 앞서 85세 이상의 빈곤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해당년도에 큰폭 증가(47.76%→52.58%)를 보이는 것도 소득이 행정자료로 보완됨에 따른 빈곤선이 큰 폭 증가된 결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령 집단의 빈곤율은 그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전년대비 2.97%p, 0.93%p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표 Ⅱ-2〉 연도별 중위소득과 빈곤선 추이

(단위 : 만원, %, %p)

연도	중위소득	증가율(%)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증가율(%)
2011	2126.6	-	1063.3	-
2012	2204.5	3.66	1102.3	3.67
2013	2281.3	3.48	1140.6	3.47
2014	2329.6	2.12	1164.8	2.12
2015	2371.4	1.80	1185.7	1.79
2016	2661.3	12.22	1330.7	12.23
2017	2714.6	2.00	1357.3	2.00
2018	2781.5	2.47	1390.8	2.47
2019	2889.6	3.88	1444.8	3.88
2020	2999.3	3.80	1499.7	3.80
평균 증가(%p)	-	3.94	-	3.9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노인연령별 중위소득 추이는 아래의 〈표 Ⅱ-3〉과 같음.

- 65세 이상 노인의 중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6.31%p로써, 전체 중위소득 증가율보다 대략 2.7%p 높음. 65-74세 연소노인의 중위소득 증가율은 6.63%로 전체 노인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임.
- 특히 2015년과 2016년 사이 행정자료로 소득 파악이 더 정확해지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중위소득 증가율은 18%에 육박함.

- 65세~4세의 중위소득 증가율은 7.31%p로 노인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75~4세 노인집단의 중위소득 증가율도 평균 5.49%p대를 보였으나, 85세이상 고령노인들의 중위소득 증가율은 연간 2.40%p 증가한 것에 그쳤음.
- 노인연령별 중위소득의 수준을 비교하면, 65~4세 연소노인의 중위소득을 100으로 할 때 75~4세 고령노인의 중위소득 수준은 2011년 기준 74.8% 수준이다가 2020년 67.4%로 감소함.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중위소득 수준 또한 2011년(65-74세 100 기준) 94.4% 수준이었지만 2020년 63.6%로 큰 폭으로 감소함.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의 중위소득 수준의 격차가 75세를 기점으로 커지고 있음.
- 빈곤율의 추이와 비슷하게 중위소득의 수준 또한 2017년부터 75~84세 노인집단의 중위소득이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Ⅱ-3〉 노인연령별 중위소득 추이

(단위 : 만원, %p)

연도	65세 이상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11	1079.9	1184.9	886.4	1118.1
2012	1148.5	1271.7	898.9	1161.6
2013	1180.8	1339.7	893.4	1201.8
2014	1260.9	1398.5	907.6	1247.6
2015	1298.7	1486.5	940.3	1257.5
2016	1536.7	1825.3	1125.6	1237.9
2017	1604.0	1912.7	1186.0	1170.7
2018	1656.8	1947.9	1247.2	1183.8
2019	1709.8	2070.4	1338.7	1218.1
2020	1858.9	2209.5	1489.9	1404.7
평균 증가(%p)	6.31	7.31	5.49	2.4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핵심생산인구(25-49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수준.

- 핵심생산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Ⅱ-4〉와 같음.
-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 수준은 핵심생산인구의 대략 55% 수준이었으며, 중위소득은 이보다 낮은 45.81% 수준이었음.
- 2011년과 2020년 사이 노인의 소득수준이 점차 상승하여 평균과 중위소득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평균은 64.77%, 중위소득은 57.31% 수준으로 증가함.
- 특히 2016년 소득이 행정자료로 보완된 이후로 소득수준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이는 공적이전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해 정확성이 높아진 것의 결과로 보임.
- 노인세대의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미뤄보아, 2015년까지의 노인빈곤율 또한 소득 응답의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대측정된 부분 이 존재함.

〈표 Ⅱ-4〉 핵심생산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수준

(단위 : %)

연도	평균소득 비율	중위소득 비율
2011	54.46	45.81
2012	56.34	47.57
2013	57.13	47.39
2014	58.31	49.49
2015	58.95	49.43
2016	63.28	53.34
2017	62.72	54.72
2018	62.27	54.63
2019	61.75	53.98
2020	64.77	57.3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연도별 노인연령별 소득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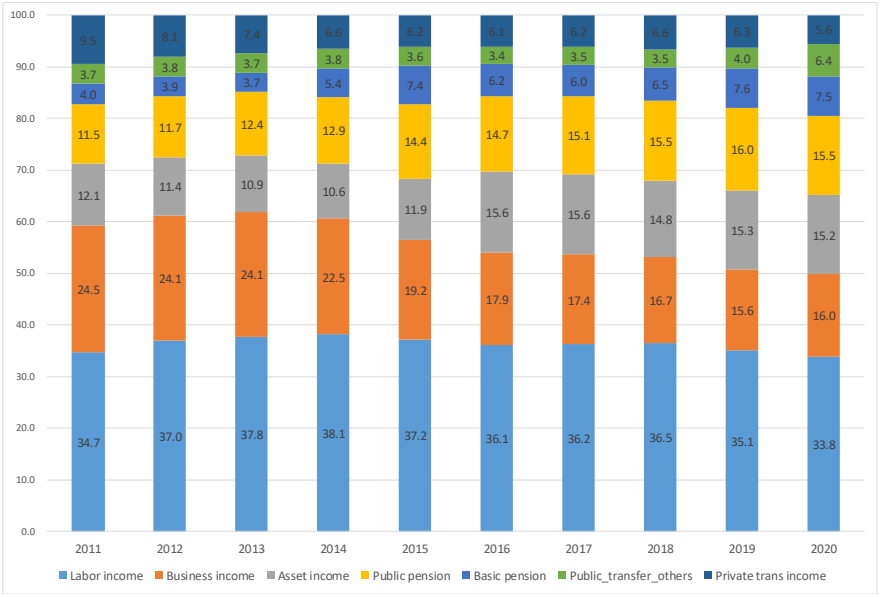
○ 아래의 소득구성 분석은 경상총소득을 사용함.

- 경상총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임.

○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은 아래의 [그림 Ⅱ-1]과 같음.

-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59.2%에서 2020년 49.8%로 대략 9.4%p 감소하였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집단의 소득수준(중위소득, 평균)이 핵심생산연령대비 높아진 가운데, 경상총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것은 다른 소득요소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기타공적이전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공적이전소득은 2011년 19.2%에서 2020년 29.35%로 10.14%p 증가하였음.
- 세부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국민·특수직역 연금)의 비중은 2011년 11.5%에서 2020년 15.5%로 대략 4%p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 또한 같은 기간 3.5%p 증가하였음. 그 외 기타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포함) 또한 2.7%p 증가함.
-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2011년 9.5%에서 2020년 5.6%로 대략 4%p 감소하였음. 실증분석이 필요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Ⅱ-1] 65세 이상 노인 전체 소득구성비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노인연령집단별 소득구성의 추이는 아래의 〈표 Ⅱ-5〉, 〈표 Ⅱ-6〉, 〈표 Ⅱ-7〉과 같음.

○ 65-74세 연소노인의 경우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인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9.1%에서 52.5%로 감소하였음.

- 이중 임금소득은 0.7%p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7.3%p 감소하여 감소폭이 큼.
- 또한 공적이전소득은 2011년 19.8%에서 2020년 28.5%로 8.8%p 증가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은 같은기간 8%에서 4.2%로 3.8%p 감소
-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고령 노인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컸지만 증가폭은 둔화됨. 특히 연소노인의 공적연금 비중이 2011년

13.5%에서 2020년 17%로 증가하여,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비중이 75세 이상 고령노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비중이 2011년의 경우 8.0%로 노인 전체평균인 9.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0년의 경우 4.2%로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낮음.

❍ 75-84세 고령노인의 경우,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인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6.9%에서 44.6%로 12.3%p 감소하였음.

- 사업소득의 감소가 9.7%p로 근로소득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은 2011년 18.6%에서 2020년 30.9%로 증가하여 12.3%p 증가하여 연령집단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7.9%에서 2020년 13.5%로 증가하여 5.6%p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의 증가율 또한 5.1%p로 높게 나타남.

❍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경우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인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9.5%에서 48.3%로 21.2%p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

- 초고령 노인집단의 2017년까지 노동소득이 높은 이유는 가구 내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존재로 인한 결과로 해석됨. 그 이후 연도의 경우 가구구조의 변화 즉 1인 가구 및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동소득의 감소가 다른 노인연령집단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
- 초고령노인들의 소득구성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은 다른연령대와 비슷하게 2011년 16%에서 2020년 30.1%로 14.1%p 증가를 보임.
- 공적이전소득 중 특히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 2011년 3.9%에서 2020년 11%로 7.1%p의 증가를 보임.
- 다른 연령집단 노인과 달리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2011년 8.3%에서 2020년 8.1%로 비슷한 비율을 보임.

〈표 Ⅱ-5〉 65-74세 소득구성 추이

(단위 : %, %p)

연도	임금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타공적 이전소득	
2011	34.1	25.0	13.0	19.8	13.5	3.4	2.9	8.0
2012	36.1	24.3	12.5	20.1	13.8	3.3	2.9	7.0
2013	36.5	25.0	11.8	20.4	14.5	3.1	2.8	6.3
2014	38.2	22.7	11.2	22.5	15.0	4.5	3.0	5.5
2015	37.3	20.1	12.2	25.1	16.2	5.9	3.0	5.2
2016	36.1	19.5	15.7	23.8	16.2	4.8	2.8	4.9
2017	37.3	18.6	15.3	24.1	16.5	4.5	3.0	4.8
2018	37.2	18.1	14.6	25.2	17.2	5.0	3.0	4.9
2019	35.9	17.0	15.5	27.0	17.8	5.6	3.6	4.7
2020	34.8	17.7	14.8	28.5	17.0	5.7	5.8	4.2
변화%p	0.7	-7.3	1.8	8.7	3.5	2.3	2.9	-3.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Ⅱ-6〉 75-84세 소득구성 추이

(단위 : %, %p)

년도	임금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타공적 이전소득	
2011	34.0	22.9	11.3	18.6	7.9	5.3	5.5	13.2
2012	36.9	23.3	10.0	18.8	8.3	5.1	5.4	10.9
2013	38.2	22.5	10.1	19.3	8.9	5.1	5.4	9.9
2014	36.5	21.8	10.4	22.1	9.9	7.3	4.9	9.2
2015	35.3	16.9	12.2	27.3	12.2	10.5	4.6	8.4
2016	35.1	14.5	16.1	25.7	12.9	8.7	4.2	8.5
2017	33.9	14.7	16.8	25.6	13.2	8.5	3.9	9.0
2018	34.5	14.1	15.8	26.1	13.0	9.1	4.0	9.6
2019	33.1	13.5	15.8	28.7	13.7	10.7	4.3	8.9
2020	31.4	13.2	16.6	30.9	13.5	10.4	7.0	7.9
변화%p	-2.6	-9.7	5.3	12.3	5.6	5.1	1.5	-5.3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Ⅱ-7〉 85세 이상 소득구성 추이

(단위 : %, %p)

년도	임금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타공적 이전소득	
2011	42.6	26.9	6.2	16.0	7.2	3.9	4.8	8.3
2012	45.9	25.0	7.1	15.6	6.8	3.9	5.0	6.3
2013	45.9	22.4	7.4	16.9	8.2	3.9	4.8	7.4
2014	43.6	23.5	7.3	19.7	7.8	6.2	5.7	5.9
2015	43.7	20.9	7.8	21.8	8.2	8.4	5.3	5.8
2016	41.3	17.3	11.8	22.6	9.0	8.3	5.3	7.0
2017	37.1	17.4	13.0	24.9	10.4	8.5	6.0	7.6
2018	38.7	15.1	11.6	25.4	9.9	9.6	5.9	9.3
2019	37.3	12.9	11.9	28.2	9.8	11.6	6.7	9.8
2020	34.7	13.6	13.4	30.1	10.4	11.0	8.7	8.1
변화%p	-7.9	-13.3	7.2	14.1	3.2	7.1	3.9	-0.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4) 빈곤여부에 따른 소득 구성 비율과 소득 수준

❍ 빈곤여부에 따른 소득구성을 분석한 표는 아래의 〈표 Ⅱ-8〉과 〈표 Ⅱ-9〉와 같음.

❍ 비빈곤 노인과 빈곤 노인의 소득구성을 비교하면, 비빈곤 노인의 경우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인 노동소득의 비중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비빈곤 노인의 2011년 노동소득(임금소득+사업소득) 비중은 66.5%에서 2020년 60%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업소득의 감소 폭이 큼.

❍ 반면 빈곤노인의 노동소득 비중은 비빈곤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2011년 기준 노동소득의 비중은 총소득에서 28.53%로 비빈곤 노인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2020년 기준 18%로 20% 미만을

나타냄.

○ 재산소득의 비중은 비빈곤 노인이 2020년 16.01%로 빈곤노인의 11.13%보다 높았으나 다른 소득 구성에 비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 공적이전소득은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비빈곤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011년 16%에서 2020년 24.23%로 증가함.

- 공적이전소득 중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11년 12.28%에서 2020년 15.75%로 대략 3.5%p 증가함. 기초연금이나 기타공적이전소득은 2020년 기준 대략 4~4.5% 비중을 차지함.

○ 반면 빈곤 집단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1년 32.7%에서 2020년 56.2%로 대략 23.5%p 증가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빈곤 집단과 비슷하게 2020년 기준 14% 정도.
-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6%로 비빈곤 집단에 비해서 컸으며, 기타공적이전소득의 비중또한 2020년 기준 16.4%로 비빈곤 집단과 비교할 때 큼.

○ 사적이전소득은 비빈곤 집단의 경우는 2011년 대략 4.9%대에서 2020년 3.8% 대로 감소하였으며, 빈곤집단의 경우 2011년 28.98%에서 2020년 14.66%로 14.32%p 감소함.

〈표 II-8〉 65세 이상 비빈곤 노인 소득 구성

(단위 : %, %p)

연도	임금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타공적 이전소득	
2011	39.48	27.01	12.61	16.00	12.28	1.50	2.21	4.89
2012	41.76	26.34	12.00	16.02	12.19	1.53	2.30	3.88
2013	42.34	26.58	11.12	16.40	12.73	1.46	2.21	3.56
2014	42.87	24.88	10.88	18.00	13.17	2.28	2.55	3.37
2015	42.24	21.25	12.61	20.42	14.85	3.16	2.41	3.48
2016	40.68	19.57	16.15	19.85	15.02	2.81	2.02	3.75
2017	40.58	18.89	16.05	20.41	15.37	2.83	2.20	4.08
2018	41.15	18.34	15.35	21.03	15.72	3.15	2.16	4.13
2019	39.90	17.09	15.96	22.90	16.38	3.78	2.74	4.15
2020	38.20	17.73	16.01	24.23	15.75	3.99	4.49	3.83
변화%p	-1.29	-9.29	3.40	8.23	3.47	2.49	2.28	-1.0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II-9〉 65세 이상 빈곤 노인 소득 구성

(단위 : %, %p)

연도	임금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타공적 이전소득	
2011	14.41	14.12	9.81	32.68	8.17	14.36	10.15	28.98
2012	16.17	13.98	8.83	34.35	9.62	14.31	10.42	26.67
2013	16.87	12.70	10.14	35.35	10.74	13.96	10.64	24.94
2014	15.61	10.96	9.55	42.04	11.74	20.58	9.72	21.84
2015	13.51	9.84	8.34	49.44	12.40	27.60	9.44	18.87
2016	12.74	9.32	12.56	47.02	13.05	23.56	10.41	18.35
2017	13.18	9.40	13.19	46.65	13.81	22.60	10.24	17.58
2018	12.61	8.09	11.75	48.33	14.09	23.89	10.35	19.23
2019	11.75	8.44	12.17	50.61	14.09	26.13	10.39	17.02
2020	10.91	7.08	11.13	56.22	13.97	25.87	16.39	14.66
변화%p	-3.50	-7.05	1.32	23.55	5.80	11.51	6.24	-14.3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빈곤여부에 따른 소득요소별 수준(평균)을 분석한 표는 아래의 〈표 Ⅱ-10〉과 〈표 Ⅱ-11〉과 같음.

○ 총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비빈곤 노인이 빈곤 노인보다 낮았지만 절대적인 금액 평균은 비빈곤 노인이 높음.

- 2020년 기준 비빈곤 노인이 904만원이고 빈곤 노인이 626만원임.
- 비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 평균액이 2020년 기준 588만원으로 빈곤 노인의 156만원보다 훨씬 높았으며, 기초연금은 빈곤노인의 평균 금액이 288만원으로 비빈곤 노인의 평균 금액인 149만원보다 대략 두 배 가까이 높음.

○ 2020년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금액이 2019년에 비해서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의 영향임.

〈표 II-10〉 비빈곤 노인의 각 소득 요소별 평균액

(단위 : 만원)

연도	경상총소득	임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 공적 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2011	2677.9	1057.3	723.4	337.8	428.5	328.9	40.2	59.3	131.0
2012	2827.2	1180.8	744.6	339.3	452.8	344.5	43.2	65.1	109.7
2013	2932.1	1241.4	779.3	325.9	481.0	373.4	42.8	64.7	104.5
2014	2963.6	1270.4	737.2	322.4	533.6	390.4	67.6	75.6	100.0
2015	3030.3	1280.1	644.1	382.0	618.8	450.0	95.7	73.1	105.4
2016	3468.8	1411.1	678.8	560.2	688.7	521.0	97.5	70.2	130.0
2017	3495.3	1418.4	660.3	560.9	713.2	537.4	98.8	77.0	142.6
2018	3558.4	1464.1	652.7	546.3	748.3	559.5	111.9	76.9	146.9
2019	3584.7	1430.1	612.7	572.0	821.0	587.3	135.6	98.1	148.7
2020	3732.4	1425.6	661.6	597.7	904.4	587.9	148.9	167.6	143.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1: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 2: 2020년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값임.

〈표 Ⅱ-11〉 빈곤 노인의 각 소득 요소별 평균액

(단위 : 만원)

연도	경상총소득	임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 공적 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2011	659.8	95.1	93.2	64.7	215.6	53.9	94.7	67.0	191.2
2012	673.3	108.9	94.2	59.4	231.3	64.8	96.3	70.2	179.6
2013	685.2	115.6	87.0	69.5	242.2	73.6	95.7	72.9	170.9
2014	700.8	109.4	76.8	66.9	294.6	82.3	144.2	68.1	153.1
2015	735.4	99.3	72.3	61.3	363.6	91.2	203.0	69.4	138.8
2016	868.3	110.6	80.9	109.1	408.3	113.3	204.6	90.4	159.3
2017	898.7	118.5	84.5	118.5	419.2	124.1	203.1	92.0	158.0
2018	955.5	120.4	77.3	112.2	461.8	134.7	228.3	98.8	183.7
2019	1029.8	121.0	87.0	125.3	521.2	145.1	269.1	107.0	175.3
2020	1114.0	121.6	78.9	124.0	626.3	155.6	288.2	182.6	163.3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1: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 2: 2020년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값임.

5) 기초연금 수급과 빈곤의 관계

○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과 빈곤의 관계에 대해 분석함.

○ 빈곤여부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나눠서 4가지 집단을 구분한 후 2011년부터 2020년 까지의 비율 변화를 살펴봄(아래 〈표 Ⅱ-12〉 참조).

○ 2011년 빈곤노인 중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은 대략 39%로써, 대략 10%의 노인은 빈곤하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빈곤율이 감소하면서 빈곤하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함께 감소하는데, 2020년 빈곤하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비중은 33.2%로 2011년 대비 6.1%p 감소하였으며,

- 반대로 비빈곤이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비중은 2011년 22.8%에서 2020년 34.3%로 11.5%p 크게 증가함.

○ 최근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되게 설계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비빈곤이지만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4가지 집단 중에 가장 눈여겨 볼 집단은 빈곤하지만 기초연금을 비수급하는 노인집단인데 이 집단은 2011년 9.9% 비율이다가 2020년 5.8%로 감소함.

○ 이 집단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임. 즉 소득은 빈곤하지만 기초연금과 대표적인 공적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기초연금 제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두 제도 모두 수급자격을 소득인정액 즉 월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이 빈곤하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노인 본인과 부부단위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표 Ⅱ-12〉 빈곤여부와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집단별 비율

(단위 : %, %p)

빈곤여부	빈곤		비빈곤		합계
기초연금 수급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2011	39.3	9.9	22.8	28.1	100.0
2012	39.0	9.6	24.9	26.4	100.0
2013	38.2	10.2	24.3	27.3	100.0
2014	37.5	9.5	25.7	27.4	100.0
2015	38.5	8.2	27.0	26.3	100.0
2016	36.3	7.3	29.2	27.2	100.0
2017	35.2	7.1	29.9	27.8	100.0
2018	36.4	5.7	31.0	27.0	100.0
2019	35.7	5.7	31.9	26.7	100.0
2020	33.2	5.8	34.3	26.8	100.0
변화%p	-6.1	-4.1	11.5	-1.4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실제로 4개의 집단에 대한 총자산 평균(제곱근 가구원수로 균등화)을 분석한 결과(아래 〈표 Ⅱ-13〉 참조).

- 빈곤하지만 기초연금을 비수급하는 노인집단의 총자산 평균은 2020년 기준 3억 7천만원 수준으로, 빈곤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집단(9천 3백만원)의 대략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 다만 가금복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아래 표의 총자산 수준은 노인 개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은 아니며, 노인이 속한 가구의

자산총합임. 즉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산정을 위한 행정자료와 차이가 있음.

○ 빈곤·기초연금비수급 노인의 자산은 비빈곤·기초연금수급 노인의 자산보다 대략 2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 노인 중 대략 2020년 기준 6% 정도가 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빈곤에서 탈출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전체 노인의 40% 정도가 빈곤하며, 빈곤·기초연금비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상위 30% 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을 유동화 한다면 빈곤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렇게 자산을 유동화 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대략 33% 정도로 예상.

〈표 Ⅱ-13〉 빈곤여부와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집단별 총자산 평균

(단위 : 만원)

빈곤여부	빈곤		비빈곤	
기초연금 수급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2011	5595.2	19735.5	9379.3	31458.7
2012	5777.2	21043.5	10349.5	32206.3
2013	5815.9	21056.7	10229.2	31992.2
2014	6340.3	21406.7	10798.6	33154.8
2015	6408.0	23405.9	10919.7	36398.3
2016	7032.9	25579.3	10976.2	38813.3
2017	7619.1	28470.3	11714.8	41245.2
2018	7920.8	28011.8	12357.6	43734.3
2019	8624.2	30152.0	12504.8	45876.4
2020	9325.0	37414.4	14509.2	51465.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2020년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값임.

○ 다음으로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Ⅱ-14〉와 같음.

○ 대략 비빈곤집단의 평균 소득이 빈곤집단 대비 대략 3배~4배 정도 높게 나타남.

○ 빈곤·기초연금수급 노인의 경우 2011년과 2020년 사이 소득이 70%를 넘어 큰 폭으로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빈곤·기초연금 비수급 노인은 대략 소득이 50% 정도 증가함.

〈표 Ⅱ-14〉 빈곤여부와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처분균등화 소득 평균

(단위 : 만원, %)

빈곤여부	빈곤		비빈곤	
기초연금 수급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2011	591.9	675.8	2089.6	2640.5
2012	597.4	680.0	2205.3	2772.8
2013	603.5	720.8	2291.7	2877.2
2014	635.3	688.1	2315.4	2942.0
2015	671.7	732.4	2395.1	3034.0
2016	792.9	841.6	2696.7	3498.9
2017	806.1	873.2	2649.8	3549.9
2018	863.7	916.8	2689.0	3616.1
2019	931.6	951.7	2737.5	3665.2
2020	1020.7	1012.3	2824.9	3880.0
변화율	72.44	49.79	35.19	46.9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1: 소득년도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된 자료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 2: 2020년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값임.

Ⅲ. OECD 국가 노인의 소득구성과 빈곤차이 분해[2)]

○ 본 장에서는 룩셈부르크 소득자료(Luxembourg Income Study)를 이용하여 OECD 주요국의 연령별 빈곤율, 소득구성 그리고 빈곤과의 관계에 관해 살펴봄.

1. 데이터 소개

○ LIS 소득 데이터는 LIS 센터에서 구축된 국가별 소득데이터로써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걸쳐 대략 50여 개국의 비교가능한 미시 자료(harmonised microdata)를 포함하고 있음.

- LIS 데이터 셋에 포함된 각 국의 원자료는 대부분 해당국가의 통계청 혹은 관련 정부기관에서 구축된 데이터로써[3)]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함.
- 우리나라 자료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결합 자료가 포함됨.
- LIS데이터 센터는 국가비교를 위한 상대적 빈곤율 산출을 위해 상단(top)/하단(bottom) 코딩 방식을 제안하며, 이 방식을 따라 균등화된 가구소득 중위값의 10배로 탑코딩을 실시하였고, 균등화된 가구소득 평균값의 1% 이하는 1%에 해당하는 경계값으로 다시 대체(bottom-coding)함.
- 본 연구에서 산출된 빈곤율은 LIS 데이터센터 홈페이지의 “Inequality and Poverty Key Figures”에서 제시한 각 국가별 65세이상 빈곤

2) 본 장의 내용은 안서연·한정림·왕승현(2021) 보고서(발간예정)의 제3장을 요약정리한 것임.

3) 일본 자료는 게이오 대학교 패널연구 센터에서 구축한 일본가구패널 조사(Japan Household Panel Survey, JHPS)자료 임.

율과 동일하게 산출.

○ 평균소득 수준 비교를 위해 각 국의 통화가치를 2017년 USD 달러로 조정한 값을 제시.

- 각국의 조사시점이 2013년부터 2019년(한국은 2006년 포함)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CPI를 이용하여 현지 화폐를 2017년의 값으로 조정하고, 다음으로 2017년 CPI로 조정된 현지 화폐를 2017년 미국 US 달러 값(USD 2017=1)으로 두단계로 조정[4].

○ 소득항목은 노동소득, 자본소득, 공적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함

- 노동소득은 사업소득, 임금소득을 의미하며, 자본소득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을 의미함. 공적연금 소득은 (비)기여 공적연금 및 직역연금, 개인 연금을 포함하며, 공적이전소득은 가족수당, 실업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주택급여 등을 포함함. 사적이전소득은 장학금, 가구 간 이전 자선단체로부터의 현금이전을 의미함

4) PPP Deflators는 World Bank's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추출된 값을 사용하며, 각국의 화폐가치 조정을 위한 CPI와 PPP를 함께 고려한 '2017 LIS PPP' 값을 LIS 홈페이지에서 제공.

2. 분석전략 및 분석방법

○ (분석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북유럽의 노르웨이, 대륙유럽의 독일, 남부유럽의 그리스, 영미권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국가인 호주, 아시아의 일본으로 총 9개국.

○ (분석내용) 국가별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과 경제적 상황을 살펴봄.

- 첫째, 분석대상국의 빈곤율을 살펴보고, 둘째, 연령별 평균소득 수준(2017년 USD)을 비교분석함. 셋째 핵심생산인구(25~49세) 평균/중위 소득 대비 65세 노인의 평균/중위소득 수준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분석대상국의 소득구성을 살펴봄.

○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OECD 선진국의 65세이상 빈곤율 차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Blinder-Oaxaca 비선형 분해법을 이용하여 분해함.

- 즉, 우리나라 빈곤율과 분석대상 OECD 국가들의 빈곤율 차이를 분해함.

○ 각 개별 요소들이 빈곤율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는지 분해하기 위해 먼저 두 가지 부분으로 분해.

- 첫째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 혹은 설명되는 부분(explained component)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 요소의 구성, 혹은 관찰된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빈곤 차이를 의미하며, 두 국가 간 관찰되는 특성의 차이로 인해 설명되는 빈곤율의 차이 부분을 뜻함.
- 두 번째는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 혹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unexplained component)으로 분해. 임금격차 연구에서 이 부분은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서 기인한 임금 격차이기 때문에 차별로 해석.
- 본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두 국가 간 측정되지 않고 관찰

될 수 없는 특성(예를 들면 문화 차이)에 기인한 빈곤 차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 두 국가 간 빈곤율의 차이를 구성효과와 계수효과로 분리하고 난 후 각 개별 변수별 빈곤율 차이에 기여한 부분을 세부 분해함[5].

- 본 분해방법은 격차분해의 기준이 되는 준거집단의 계수를 전체 표본에 대한 계수로 설정.
- 이에 따라 특성효과에서 개별 변수의 기여도는 해당 변수를 비교대상 국가의 개별 설명변수로 대체할 때 발생하는 평균 예측확률의 차이(gap)로 계산되며, 이때 다른 설명변수의 분포는 그대로 고정(holding)하게 됨(Fairlie, 2005: 4).
- 이 방법이 유용한 이유는 이러한 개별변수의 기여도 총합이 전체 표본의 전체 변수의 총 기여도와 동일하다는 점임(Fairlie, 2005: 4).
- 본 분석에서 준거집단은 우리나라이며 비교 집단은 OECD 국가들임

○ 빈곤율 차이 분해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우리나라 데이터인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선정(아래 〈표 Ⅲ-1〉 참조).

- 개인과 가구 특성 변수인 성별과 학력수준(고졸미만, 고졸, 초대졸 이상), 배우자 유무, 가구 내 동거 자녀 수, 고용여부를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고령자의 경제적 상황은 공적연금소득, 공공부조,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소득원을 추가로 분석에 투입.
- 해당 소득원의 절대 금액은 국가 간 그리고 시기별로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 하기 위해 각 국가의 각 년도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한 값을 투입.

5) 이를 위해 Jann(2008)이 개발한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함.

〈표 Ⅲ-1〉 중고령자 빈곤율 차이 분해를 위한 변수의 설정

분류	변수명	측정	성격
종속변수	소득빈곤	균등화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	범주형
설명변수	성별	1=남, 0=여	범주형
	교육수준	1=고졸미만, 2=고등학교 졸업, 3=초대졸 이상	범주형
	배우자 유무	1=배우자 있음, 0=배우자 없음	범주형
	가구 내 동거하는 자녀수	가구 내 동거하는 자녀 수	연속형
	고용여부	1=노동시장 참여, 0=비근로	범주형
	공적연금 소득 비율	중위소득 대비 공적연금 소득비율	연속형
	공공부조 소득 비율	중위소득 대비 공공부조 소득비율	연속형
	사적이전 소득 비율	중위소득 대비 사적이전 소득비율	연속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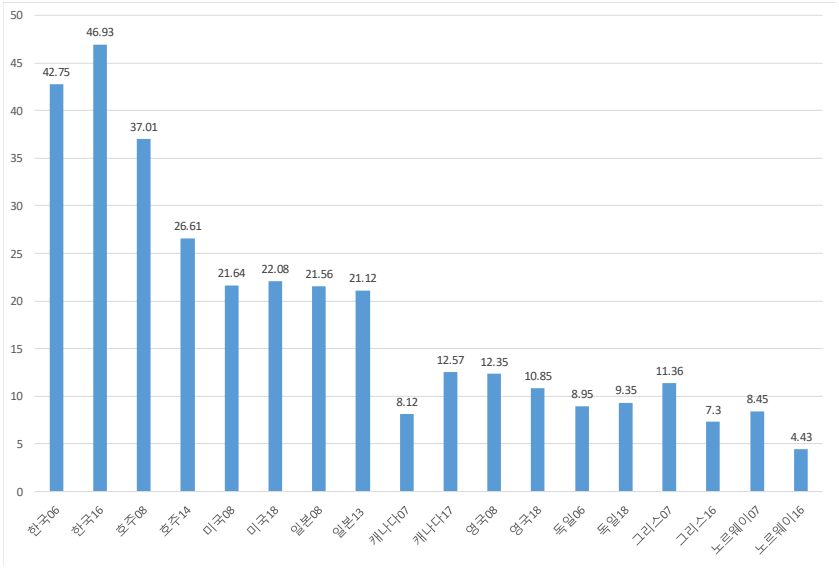
3. 분석결과

1) OECD 국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및 소득 수준

❍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다음과 같음(아래 [그림 Ⅲ-1] 참조).

- 먼저 우리나라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결합자료가 포함되었으며, 2006년 빈곤율은 42.75%에서 2016년 46.93%로 증가함.
- 다음으로 호주는 2008년 노인빈곤율 37.01%로 우리나라 보다 낮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빈곤율 수준을 보였으며, 2014년 26.61%로 감소함.
- 미국과 일본도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이며, 대략 20% 초반대의 빈곤율을 보임.
- 캐나다는 2017년 기준 12.57%, 영국은 2018년 기준 10.85%로 10% 초반대의 빈곤율을 보임.
- 독일은 2018년 기준 9.35%, 그리스는 2016년 기준 7.3%로 10% 미만의 빈곤율을 보였으며, 노르웨이는 비교국가 9개국 중 2016년 기준 4.43%의 빈곤율을 보여 가장 낮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냄.

[그림 Ⅲ-1] OECD 주요국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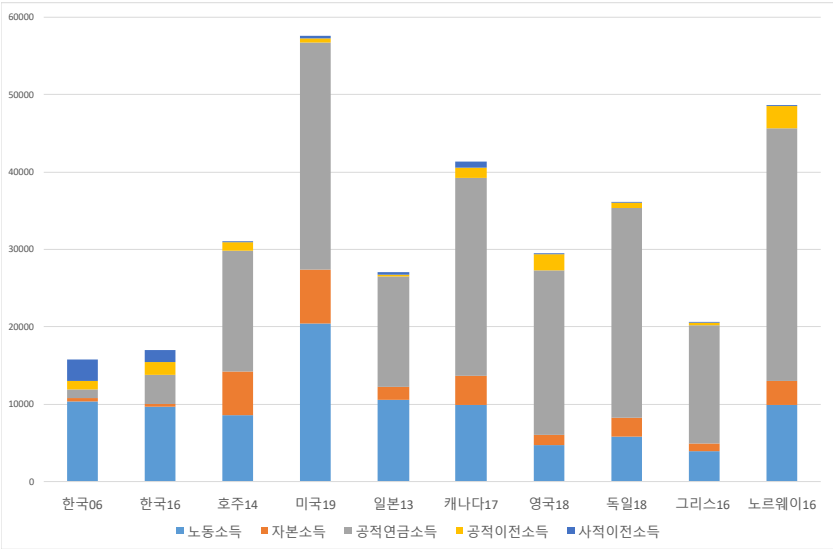
주: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나타냄(아래 [그림 Ⅲ-2] 참조).

- 미국 노인들의 평균소득이 대략 57,559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르웨이가 48,518달러로 두 번째로 높음. 캐나다가 41,297달러로 4만달러를 넘음.
- 노동소득 평균값은 미국, 일본, 노르웨이, 한국이 높았으며, 미국의 노동소득 평균액은 2만 달러 이상이었으며, 일본이 10,536달러, 노르웨이 9901달러, 한국 2016년 기준 9,710달러 순으로 높음.
- 이와 비슷하게, OECD 발표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3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일본 25.1%, 미국 18%로 OECD 평균 14.9% 보다 높음(OECD, 2020).
- 비교국가 9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의 평균소득 수준이 가장 낮음. 2016년 기준 평균소득은 17,023달러로 2006년의 15,808달러보다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9개국 중 가장 낮음. 65세 이상 평균 소득이 20,611달러임.

[그림 Ⅲ-2] OECD 주요국 65세 이상 노인평균 소득 (단위: USD 2017)



주: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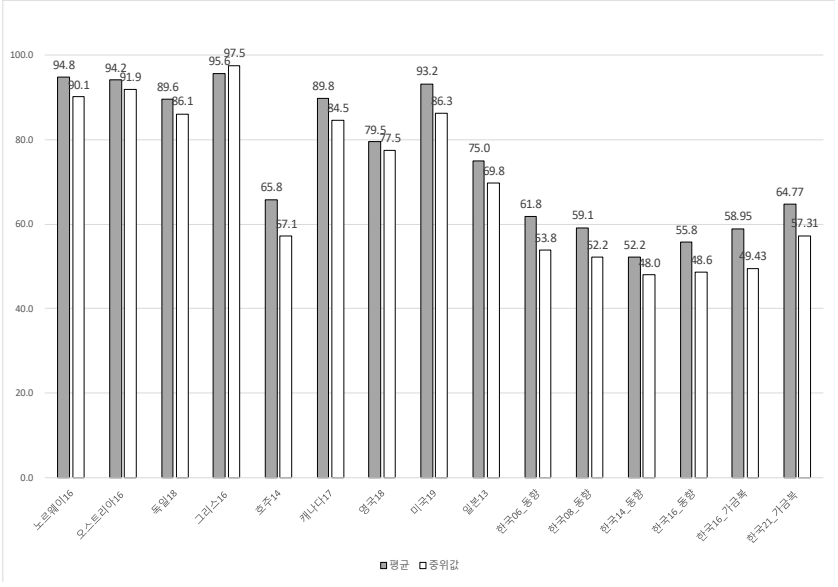
❍ 다음으로 [그림 Ⅲ-3]은 핵심생산인구(25~49세) 평균/중위 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중위소득 수준을 제시한 결과.

- 이를 통해 핵심생산인구 대비 각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평균값 기준 2006년 61.8%에서 2016년 55.8%로 감소하였으며, 중위값 기준 2006년 53.8%에서 2016년 48.6%로 감소. 이 시기 가계동향조사 자료 기준 노인빈곤율은 증가함.
- 대략 빈곤율이 낮은 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소득이 핵심생산인구 소득 평균 혹은 중위값의 80~90% 수준을 보임.
- 그리스의 경우 노인들의 평균/중위소득이 핵심생산인구의 각각 95.6%과

97.5% 수준에 이름.

- 빈곤율이 높은 수준인 호주의 경우 노인들의 소득 평균이 핵심생산인구 평균소득의 66% 수준에 그쳤으며, 일본의 경우 75% 수준(중위값 대비 대략 70%)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나라에서 핵심생산인구 대비 노인소득의 평균비율이 중위값 비율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위층에 포함된 노인의 수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함.

[그림 Ⅲ-3] 핵심생산인구 대비 노인의 평균/중위소득 수준(%)



주: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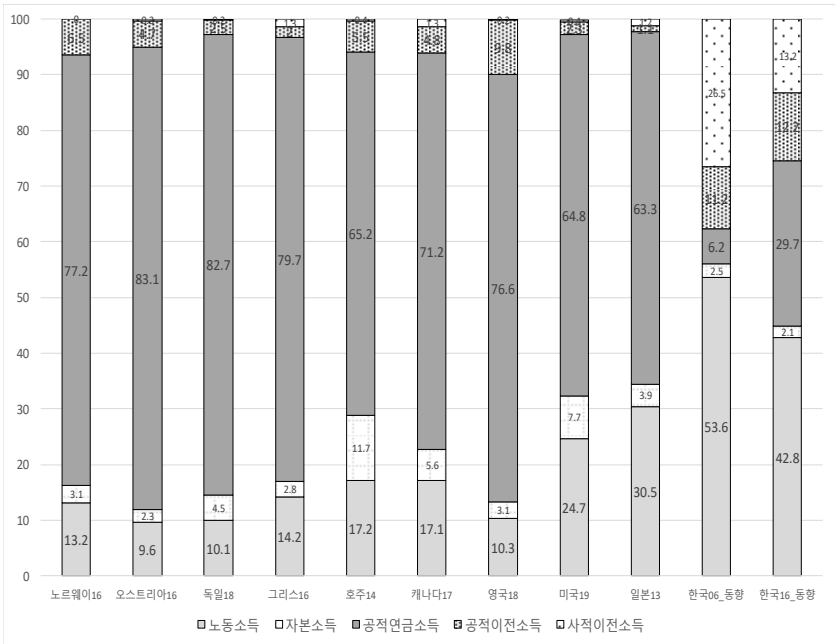
2) OECD 주요국의 소득 구성

○ 아래 [그림 Ⅲ-4]는 각국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특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42.8%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음.

-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24.7%와 30.5% 수준을 보임.
- 반면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매우 낮았는데,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 공적연금 비중은 6.2%에서 2016년 29.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 소득 비중인 호주 65.2%, 미국 64.8%, 일본 63.3%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점차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2006년과 2016년 사이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 공적연금 소득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사적이전소득은 2006년 26.5%에서 2016년 13.2%로 절반 가까이 감소.
- 노인빈곤율이 12.57%인 캐나다(2017년)의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71.2%이었으며, 영국은 10%대의 노인빈곤율을 보였으며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76.6%를 나타냄.
- 9%대의 빈곤율을 보인 독일은 2018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83%에 육박하였으며, 그리스는 79.7% 그리고 4.4%의 노인빈곤율을 보인 노르웨이는 77.2%의 공적연금 소득비중을 보임.

[그림 Ⅲ-4] OECD 주요국 소득구성



주: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3) OECD 주요국의 빈곤율 분해 결과

❍ 다음으로 아래의 〈표 Ⅲ-2〉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차이를 국가 간 인구사회학적 구성 및 노후소득보장 차이로 분해한 결과임.

❍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다른 비교 대상 국가와 큰 차이를 보임.

❍ 먼저 우리나라와 호주의 빈곤율 차이는 23.7%p 인데 이 중 대략 49%는 설명가능한 격차이고, 나머지 51%는 역사와 문화 등의 맥락에서 기인한 설명되지 않는 격차.

○ 호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빈곤율 차이를 비교할 때 대략 84%에서 100% 이상의 빈곤율 차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인.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결국 인구사회학적 구성이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서 선진국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뜻.
- 즉 사회인구학적 구성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선진국과 같을 경우, 빈곤율은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를 들어 독일과 같은 설명변수의 분포 하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51.9%에서 5.8% 수준까지 내려감.

○ 비교대상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노르웨이와 같은 설명변수 분포 하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11.8%의 빈곤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

○ 우리나라 노인들의 학력수준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라면 빈곤율은 그리스와 비교 시 최소 0.1%p 감소에서 독일과 비교 시 5.4%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

○ 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높은 고용률로 인해, 선진국과 같은 고용수준이 될 경우는 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측.

- 일본과 비교시 최소 3.9%p 증가할 예정이며, 호주와 비교시 7.9%p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성별구성, 배우자 유무, 가구 내 동거자녀 수와 같은 가구구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빈곤율 차이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음.

○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은 빈곤율 차이에 큰 기여를 함.

○ 우리나라 현재의 공적연금 수준이 비교대상 선진국의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빈곤율은 호주와 비교시 최소 24.1%p 독일과 비교시

최대 50.2%p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특히 공적연금제도가 잘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노인 중 공공부조를 받는 비율이 낮아서 선진국의 공공부조 수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빈곤율은 오히려 미세하게 1%p대에서 4%p대까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우리나라가 유독 높았는데 이 수준이 만약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빈곤율은 오히려 3%p~5%p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 한국과 OECD 비교대상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차이 분해 결과

	한국 vs 호주		한국 VS 미국		한국 vs 일본		한국 vs 영국		한국 vs 독일		한국 vs 그리스		한국 vs 노르웨이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해당국가 빈곤율	28.2	0.000	22.1	0.000	23.0	0.000	10.9	0.000	9.4	0.000	7.3	0.000	4.4	0.000
한국 빈곤율	51.9	0.000	51.9	0.000	51.9	0.000	51.9	0.000	51.9	0.000	51.9	0.000	51.9	0.000
차이	-23.7	0.000	-29.8	0.000	-28.9	0.000	-41.0	0.000	-42.5	0.000	-44.6	0.000	-47.6	0.000
설명되는 부분	-11.6 (48.9%)	0.000	-25.4 (85.2%)	0.000	-40.3 (139.4%)	0.000	-39.7 (96.8%)	0.000	-46.1 (108.5%)	0.000	-42.8 (96%)	0.000	-40.1 (84.2%)	0.000
설명되지 않는 부분	-12.1 (51.1%)	0.000	-4.4 (14.8%)	0.003	11.4 (-39.4%)	0.002	-1.3 (3.2%)	0.521	3.6 (-8.5%)	0.197	-1.8 (4.0%)	0.406	-7.4 (15.5%)	0.001
설명되는 부분 개별 변수의 기여(%p)														
성별	0.0	0.866	0.0	0.273	0.0	0.675	0.0	0.075	0.0	0.939	0.0	0.489	0.0	0.224
학력수준	-2.3	0.000	-5.1	0.000	-5.2	0.000	-1.4	0.000	-5.4	0.000	-0.1	0.268	-3.2	0.000
근로여부	7.9	0.000	4.0	0.000	3.9	0.000	5.5	0.000	5.4	0.000	5.0	0.000	4.1	0.000
배우자유무	-0.3	0.118	0.3	0.000	-0.6	0.068	0.1	0.036	0.5	0.000	0.1	0.140	0.2	0.002
가구내 동거자녀수	-0.1	0.705	-0.6	0.000	-1.3	0.019	0.7	0.000	1.5	0.000	-2.1	0.000	1.0	0.000
공적연금 수준	-24.1	0.000	-28.8	0.000	-44.6	0.000	-47.3	0.000	-50.2	0.000	-47.4	0.000	-42.1	0.000
공공부조 수준	2.4	0.000	1.8	0.000	4.4	0.000	-0.6	0.000	2.1	0.000	1.7	0.000	-0.1	0.261
사적이전수준	4.9	0.000	2.9	0.000	3.0	0.000	3.2	0.000	-	-	-	-	-	-

주: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Ⅵ. 사회보장제도 정책효과 분석

○ 본 장에서는 연도별 빈곤 지수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방법(FGT Poverty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를 사용하여 시기별 연령집단별 사회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해함.

1. 소득원천별 빈곤지수 분해 방법

○ 소득원천별 빈곤지수의 분해는 우선, 모든 가구의 소득을 0으로 둔 상태에서 시작함(홍경준, 2011).

- 다음으로 소득원천별 한계기여가 가지는 기댓값을 도출하고, 그것이 추가될 때 감소하는 빈곤의 정도를 소득원천 요소의 "빈곤 완화"효과로 간주함.
- 이를 통해 소득원천별 분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서의존성'의 문제가 제거됨.

○ 빈곤 지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해 각 연도별 그리고 두 시점 간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개별 소득원천을 분해함(홍경준, 2011).

- 먼저 각 연도별 빈곤율과 빈곤갭을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해,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개별 소득원천을 분해함.
- 시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였던 2011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후인 2015년, 그리고 가장 최근 연도인 2020년 세시점을 대상으로 분해함.
- 다음으로, 두 시점 간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해 두 시점 사이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개별 소득 원천을 분해함. 시점은 2011년과 2015년 사이, 그리고 2016년과 최근 연도인 2020년 사이를 분해함.
-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소득이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되었기 때문에 시계열의 분절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함

2. 분석 결과

1) 각 연도별 빈곤지수 분해 결과

○ 본 분석에서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차이를 소득원천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소득요소를 앞서의 소득요소와 다르게 구분함.

- 소득구분은 노동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기타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함.
- 그리고 노동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합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산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 지출을 공제한 소득).
- 이러한 소득요소의 변경 및 각 기타소득의 값이 음 의 값을 가진 경우가 있어, 빈곤율과 빈곤갭의 수치가 앞서 〈표 Ⅱ-1〉과 미세한 차이를 보임

○ 2011년, 2015년, 2020년 각 연도별 소득원천별 빈곤율 분해 결과는 아래의 〈표 Ⅳ-1〉과 같음.

○ 모든 연도에서 빈곤율 100%를 가정할 때 노동소득의 빈곤감소 기여율은 절대적 기여 기준 대략 35%~38%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노동소득 다음으로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기여율은 2011년 7.02%에서 2015년 8.75%, 그리고 2020년 9.81%로 기여율이 높아짐.

○ 기초연금의 절대적 기여도는 2011년 1.24% 에서 2015년 1.96% 그리고 2020년 2.94%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2011년 2.44%에서 4.83%로 대략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2011년 기초노령연금에서 2015년 기초연금으로 수급액이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빈곤율 감소 기여율은 상대적 기여율 기준 2.44%에서 3.68%로 50% 증가에 그침.

〈표 Ⅳ-1〉 연도별 소득원천별 빈곤율 분해 결과

(단위 : %)

항목	2011년			2015년			2020년		
	비율	절대적 기여	상대적 기여	비율	절대적 기여	상대적 기여	비율	절대적 기여	상대적 기여
노동 소득	65.92	-34.73	68.35	62.86	-35.5	66.68	56.36	-38.19	62.76
비노동 소득	12.68	-6.45	12.69	8.72	-5.48	10.29	10.46	-6.9	11.34
공적 연금	12.8	-7.02	13.82	16.06	-8.75	16.44	17.49	-9.81	16.12
기초 연금	4.43	-1.24	2.44	8.3	-1.96	3.68	8.47	-2.94	4.83
국기초	1.3	-0.07	0.14	1.15	-0.15	0.28	1.12	-0.17	0.28
기타공적이전소득	2.87	-1.3	2.56	2.91	-1.4	2.63	6.1	-2.84	4.67
합계	100.00	-50.81	100.00	100.00	-53.24	100.00	100.00	-60.85	10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다음으로 2011년, 2015년, 2020년 각 연도별 소득원천별 빈곤갭 분해 결과는 아래의 〈표 Ⅳ-2〉와 같음.

○ 모든 연도에서 빈곤갭이 100%를 가정할 때 노동소득의 빈곤갭 감소 기여율은 절대적 기여 기준 대략 41.3%~45.4%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노동소득 다음으로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절대기여율은 2011년 9.8%에서 2015년 13.44%, 그리고 2020년 16.14%로 기여율이 높아졌으며, 빈곤율 감소 기여율보다 높음.

○ 기초연금의 빈곤갭 완화 절대 기여도는 2011년 5.46%에서 2015년 10.45% 그리고 2020년 11.19%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2011년 6.92%에서 2015년 13.06%로 대략 두배 가까이 증가함. 그 기간 동안 수급액 또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예상하였듯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액은 빈곤율 감소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완화 효과를 보였으나, 빈곤갭 감소에는 보다

효과적임.

○ 특히 2011년과 2015년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효과는 빈곤율 감소보다 빈곤갭 감소 기여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Ⅳ-2〉 연도별 소득원천별 빈곤갭 분해 결과

(단위 : %)

항목	2011년			2015년			2020년		
	비율	절대적 기여	상대적 기여	비율	절대적 기여	상대적 기여	비율	절대적 기여	상대적 기여
노동 소득	65.92	-45.38	57.53	62.86	-43.02	53.76	56.36	-41.37	47.35
비노동 소득	12.68	-13.44	17.04	8.72	-8.46	10.57	10.46	-9.96	11.39
공적 연금	12.8	-9.8	12.42	16.06	-13.44	16.79	17.49	-16.14	18.47
기초연금	4.43	-5.46	6.92	8.3	-10.45	13.06	8.47	-11.19	12.81
국기초	1.3	-1.81	2.29	1.15	-1.65	2.06	1.12	-1.78	2.04
기타공적이전소득	2.87	-3	3.8	2.91	-3.01	3.76	6.1	-6.94	7.94
합계	100	-78.89	100	100	-80.03	100	100	-87.38	100

2) 두 시점 간 빈곤지수 분해 결과

○ 2011년과 2015년 두 시점 사이 빈곤율 감소에 기여한 소득원천을 분해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Ⅳ-3〉과 같음.

○ 두 해 사이의 총 빈곤율 감소는 2.41%p이었으며, 이 중에서 공적연금은 2.16%p 감소에 기여하였고, 기초연금 또한 2.58%p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기타소득 및 국기초 소득은 두 시점 사이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빈곤을 오히려 다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1년과 2015년 사이 기타소득과 국기초 소득으로 인해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두 시점간 빈곤감소에 기여한 소득원천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65~74세의 경우 두 시점 간의 빈곤율 감소는 5.71%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빈곤감소율이 높았으며, 노동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3.63%p로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적연금이 2.70%p 다음이 기초연금으로 2.43%의 순으로 나타남.

○ 75세와 84세 사이 고령노인의 경우, 두 시점사이 빈곤율은 오히려 1.51%p 증가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빈곤율을 3%p 감소시켰으며, 공적연금은 1.60%p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경우, 빈곤율은 0.47%p 감소에 그쳤으며, 이 중에서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3.18%p로 가장 컸으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0.34%p에 불과함.

〈표 Ⅳ-3〉 두 시점 사이의 빈곤율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

(단위: %, %p)

구분	2011vs 2015년			
	전체	65-74세	75-84세	85세이상
2011 빈곤율	49.17	44.59	58.23	48.23
2015 빈곤율	46.77	38.88	59.75	47.76
빈곤율 차이	-2.41	-5.71	1.51	-0.47
노동소득	-0.10	-3.63	3.20	3.34
기타소득	1.61	1.96	1.70	1.33
공적연금	-2.16	-2.70	-1.60	-0.34
기초연금	-2.58	-2.43	-3.00	-3.18
국기초	0.46	0.85	0.37	-0.32
기타공적이전소득	0.36	0.25	0.85	-1.30

○ 다음으로 2011년과 2015년 사이 빈곤갭 완화에 기여한 소득원천 분해 결과는 아래의 〈표 Ⅳ-4〉와 같음.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빈곤갭을 4.31%p 완화하였으며, 연령별로 나눠서 볼 경우, 65-74세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의 빈곤갭 완화 효과가 3.23%p, 공적연금은 2.37%p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75-84세와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의 빈곤갭 완화효과는 5%p를 넘어 공적연금의 빈곤갭 완화 효과는 각각 1.82%p와 0.37%p로 미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임.

〈표 Ⅳ-4〉 두 시점 사이의 빈곤갭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

(단위: %, %p)

구분	2011 vs 2015년			
	전체	65-74세	75-84세	85세이상
2011 빈곤율	21.11	17.90	26.72	22.63
2015 빈곤율	19.97	15.24	27.29	24.17
빈곤갭 차이	-1.14	-2.66	0.57	-1.54
노동소득	1.29	-0.95	3.25	3.15
기타소득	2.71	3.10	3.20	1.65
공적연금	-1.80	-2.37	-1.82	-0.37
기초연금	-4.31	-3.23	-5.81	-5.60
국기초	0.52	0.49	0.58	0.63
기타공적이전소득	0.45	0.30	1.18	-1.00

○ 두 시점 사이 즉 2016년과 2020년 빈곤율 감소에 기여한 소득원천을 분해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Ⅳ-5〉와 같음.

○ 두 해 사이의 빈곤율 감소는 4.59%p이었으며, 이 중에서 노동소득은 빈곤감소에 1.68%p 기여하여 기타공적이전 소득 다음으로 가장 큰 기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적연금은 1.53%p 감소에 기여하였고 기초연금은 1.42%p 빈곤감소에 그침.

○ 국기초 소득은 두 시점 사이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빈곤을 오히려 다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과 2020년 사이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기초를 제외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기여율 또한 2.06%p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두 시점별 빈곤감소에 기여한 소득원천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65-74세의 경우 두 시점간 빈곤율은 4.43%p 감소하였으며, 이중 노동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3.30%p로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적연금이 2.02%p 순으로 나타남.

○ 75세와 84세의 두 시점 사이 빈곤율은 7.32%p 감소하였으며, 노동소득의 빈곤율 감소는 1.84%p, 공적연금은 1.57%p 그리고 기초연금은 빈곤율을 2%p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경우, 빈곤율은 오히려 2.02%p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빈곤율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소득원천은 노동소득임(6.24%p).

- 반면 기초연금은 빈곤율을 2.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0.04%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았음

○ 소득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소득의 감소로 인해 초고령노인의 빈곤율은 두 시점 사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빈곤율 증가에 노동소득이 가장 큰 기여를 함.

- 공적이전소득 즉 기초연금이 확대되어도 다른 소득원천의 비율과 분포의 변화로 인해 빈곤감소 효과 만큼 빈곤율에 반영되지 못함.

〈표 Ⅳ-5〉 두 시점 사이의 빈곤율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

(단위: %, %p)

구분	2016 vs 2020년			
	전체	65-74세	75세-84세	85세이상
2016	43.73	33.96	57.87	52.79
2020	39.14	29.52	50.55	54.81
빈곤율 차이	-4.59	-4.43	-7.32	2.02
노동소득	-1.68	-3.30	-1.84	6.24
기타소득	0.59	2.18	-1.33	-1.38
공적연금	-1.53	-2.02	-1.57	-0.04
기초연금	-1.42	-0.83	-2.00	-2.11
국기초	1.51	1.62	1.51	0.62
기타공적이전소득	-2.06	-2.08	-2.09	-1.31

❍ 두 시점 사이 즉 2016년과 2020년 빈곤갭 감소에 기여한 소득원천을 분해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Ⅳ-6〉과 같음.

❍ 2016년과 2020년 사이 빈곤갭은 4.91%p 완화되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65-74세가 3.51%p, 75-84세가 7.95%p,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은 4.05%p 빈곤갭이 완화됨.

- 두 시점 사이 빈곤갭 완화에 기여한 소득원천은 노동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공적이전소득이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빈곤갭의 경우 기타공적이전소득(코로나 지원금 포함) 2.09%p, 기초연금 2.02%, 공적연금 1.29%p 그리고 노동소득 0.54%p 순으로나타남.

❍ 연령별로 나눠서 볼 경우, 65-74세 노인의 경우 기타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 완화 효과를 제외하고, 공적연금이 1.42%p로 빈곤갭 완화에 대한 기여율이 높았으며, 노동소득은 1.17%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갭 완화 효과가 컸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초연금의 빈곤갭 완화효과는 1.08%p로 낮은 편임.

○ 반면, 75-84세 고령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의 빈곤갭 완화 효과가 2.98%p로 소득원천 중 가장 컸으며 공적연금의 빈곤갭 완화 효과 또한 1.73%로 높은 편임

○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은 3.53%p의 빈곤갭 완화를 보여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공적연금은 0.71%p 감소하는데 그침.

○ 2016년과 2020년 사이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40%에 한해서 기준연금액이 30만원 인상되었지만, 2011년과 2015년 사이의 수급액 두배 인상 만큼 큰 인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시점 간 빈곤율 완화 효과나 빈곤갭 완화 효과가 2011년과 2015년 때 보다 낮음.

〈표 Ⅳ-6〉 두 시점 사이의 빈곤갭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

(단위: %, %p)

구분	2016 vs 2020년			
	전체	65-74세	75세-84세	85세이상
2016	17.53	12.08	24.80	25.26
2020	12.62	8.57	16.85	21.21
빈곤갭 차이	-4.91	-3.51	-7.95	-4.05
노동소득	-0.54	-1.17	-0.77	3.99
기타소득	0.62	1.54	-0.71	-1.40
공적연금	-1.29	-1.42	-1.73	-0.71
기초연금	-2.02	-1.08	-2.98	-3.53
국기초	0.41	0.32	0.73	0.11
기타공적이전소득	-2.09	-1.70	-2.49	-2.53

V. 결 론

1. 요약

○ 노인빈곤율은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전체인구 빈곤율보다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의 빈곤율은 38.9%로 30%대에 들어섬.

- 그러나 2012년과 2020년 사이 시장소득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시장소득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목적을 지님.

- 첫째,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노인 소득 분포와 빈곤 실태가 어떤 양상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둘째, OECD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과 구성을 비교함. 셋째,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어떤 요인 차이에 의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지 실증 분석 하고, 마지막으로 2011년과 2020년간 확대된 노인소득 보장 정책의 빈곤 효과가 어떤 수준인지 평가함.

○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46.5%에서 38.97%까지 7.53%p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노인연령별 빈곤율은 상이한 추세를 보임.

- 2011년과 2020년 9년 동안 노인연령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연소노인인 65세와 74세 노인의 빈곤율 감소가 15.15%p로 가장 컸으며, 75-84세 노인의 빈곤율은 7.90%p 감소함. 그러나 8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오히려 6.08%p 증가함.

- 2015년과 2016년 사이 소득항목이 조사에서 행정자료로 대체·보완됨에 따라 소득분포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중위소득과 빈곤선이 각각 전년대비 12.22%와 10.9%로 큰 폭 증가함.
- 8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증가한 반면, 빈곤갭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으로 미뤄볼 때,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빈곤선의 빠른 증가로 인해 빈곤율 감소는 더디지만, 상대적인 소득수준(가처분 소득 기준)은 빈곤선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중위소득과 빈곤선 추이를 살펴보면, 중위소득은 2011년 2,127만원에서 2020년 2,999만원으로 대략 872.7만원 가량 증가하여 연간 3.94%p 증가하였음.

- 65세 이상 노인의 중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6.31%p로써, 전체 중위소득 증가율보다 대략 2.7%p 높음.
- 2016년 소득이 행정자료로 보완된 이후로 소득 수준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이는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해 소득의 정확성이 높아진 결과로 보임.

❍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59.2%에서 2020년 49.9%로 대략 9.3%p 감소하였음.

❍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공적이전소득은 2011년 19.2%에서 2020년 29.35%로 10.14%p 증가하였음.

- 세부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국민·특수직역 연금)의 비중은 2011년 11.5%에서 2020년 15.5%로 대략 4%p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 또한 같은 기간 3.5%p 증가하였음. 그 외 기타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포함)또한 2.7%p 증가함.
-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2011년 9.5%에서 2020년 5.6%로 대략 4%p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과 빈곤의 관계에 대해 분석함.

○ 빈곤·기초연금비수급 노인비중은 2011년 9.9%에서 2020년 5.8%로 감소함.

- 이 집단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임. 즉 소득은 빈곤하지만 기초연금과 대표적인 공적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빈곤·기초연금비수급 노인비중의 총자산 평균은 2020년 기준 3억 7천만원 수준으로 빈곤·기초연금수급(9천 3백만원)의 대략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비빈곤·기초연금수급 노인의 자산보다 대략 2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빈곤 노인 중 대략 2020년 기준 6% 정도가 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빈곤탈출 가능. 그 경우 노인빈곤율은 대략 33% 로 예상.

- 현재 전체 노인의 40% 정도가 빈곤하며, 빈곤·기초연금비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상위 30% 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을 유동화 한다면 빈곤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LIS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결합자료 기준 대략 40%대를 보임.

- 호주, 미국, 일본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대략 20% 초반대를 보였으며, 캐나다, 영국은 10% 초반대 그리고 독일, 그리스의 경우 10% 미만, 노르웨이는 5% 미만의 노인빈곤율을 보임.

○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의 특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42.8%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음.

- 우리나라 다음으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21.6%와 31.3% 수준을 보임.

○ 반면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매우 낮았는데,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 공적연금 비중은 6.2%에서 2016년 29.7%(기초연금 포함)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 소득 비중인 호주 65.2%, 미국 65.3%, 일본 62.9%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노인빈곤율이 17%인 캐나다(2017년)의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71.2%이었으며, 영국은 10%대의 노인빈곤율을 보였으며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76.6%를 나타냄.

○ 우리나라와 OECD 분석대상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차이를 국가 간 인구사회학적 구성 및 노후소득보장 차이로 인한 빈곤율 차이(설명되는 부분)와 설명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한 차이로 분해한 결과, 국가마다 편차를 보이지만, 대략 빈곤의 84%에서 100% 이상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인함.

- 독일과 같은 설명변수의 분포 하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51.9%에서 5.8%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함. 노르웨이와 같은 설명변수 분포 하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11.8%의 빈곤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높은 빈곤율은 공적연금 소득 수준의 차이가 빈곤율 증가에 가장 큰 기여(24%p~50.2%p)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높은 고용률(3.9%p~7.9%p)과 사적이전소득(2.9%p~4.9%p)은 빈곤율을 완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함.

○ 2011년, 2015년, 2020년 각 연도별 소득원천별 빈곤율과 빈곤갭을 분해한 결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액은 빈곤율 감소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완화 효과를 보였으나, 빈곤갭 감소에는 보다 효과적임.

○ 특히 2011년과 2015년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효과는 빈곤율 감소보다 빈곤갭 감소 기여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과 2015년 두 시점 사이 빈곤율 감소에 기여한 소득원천을 분해한 결과, 총 빈곤율 감소는 2.41%p이었으며, 이 중에서 공적연금은 2.16%p 감소에 기여하였고 기초연금 또한 2.58%p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령일수록 기초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남. 65-74세 2.43%p, 75-84세는 3%p, 85세 초고령노인의 경우 3.18%p.

○ 빈곤갭 완화는 연령별로 효과차이가 컸음. 65-74세 3.23%p, 75-84세 5.81%p, 85세 이상 5.60%p 감소효과를 보임.

○ 2016년과 2020년 빈곤율 감소는 총 4.59%p이었으며, 이 중에서 노동소득은 빈곤감소에 1.68%p 기여하였으며, 공적연금은 1.53%p 감소에 기여하였고 기초연금은 1.42%p 빈곤을 감소시킴

- 65-74세의 경우 두 시점 간 빈곤율은 4.43%p 감소하였는데, 이중 노동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3.30%p로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적연금이 2.02%p 순으로 나타남.
- 75세와 84세의 두 시점 사이 빈곤율은 7.32%p 감소하였으며, 노동소득의 빈곤율 감소는 1.84%p, 공적연금은 1.57%p 그리고 기초연금은 빈곤율을 2.0%p 감소에 기여.
-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경우, 빈곤율은 오히려 2.02%p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빈곤율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소득원천은 노동소득임(6.24%p). 반면 기초연금은 빈곤율을 2.11%p 감소.

○ 빈곤갭의 경우 65-74세 노인은 공적연금이 1.42%p, 노동소득은 1.17%p로 빈곤갭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75-84세 고령노인과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의 빈곤갭 완화 효과가 각각

2.98%p와 3.53%로 소득원천 중 가장 큰 빈곤갭 완화 효과를 보임

○ 2016년과 2020년 사이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40%에 한해서 기준연금액이 30만원 인상되었지만, 수급액의 큰 인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시점간 빈곤율 완화 효과나 빈곤갭 완화 효과가 2011년과 2015년 때 보다 낮음.

2. 정책적 함의

○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소득구성을 살펴볼 때, 노동소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감소 혹은 증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특히 65-74세(연소노인)의 경우 2015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빈곤율은 9.35%p 감소하였는데, 이중 노동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7.25%p로 크게 나타남.

○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에 진입할 경우에도 노동소득의 큰 감소가 없다면, 연소노인의 빈곤율 감소가 전체 노인의 빈곤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65세 노인의 연령별 빈곤율과 소득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

- 특히 베이비부머가 노인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노인집단의 이질성은 더욱 커질 예정임.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도 연령대 별로 다른 효과를 보임.

○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대성은 빈곤율 완화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할지 모르지만, 빈곤갭의 완화에는 효과적임.

○ 기초노령연금이 2012년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기준연금액이 3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노동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줄어들었음.

- 실증분석이 필요하지만 구축효과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사적이전소득은 큰폭으로 줄었으며,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대하더라도, 빈곤율의 감소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2020년 총경상소득 기준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5.6%로 감소하여, 향후 공적이전소득의 확대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 둔화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5.6% 비중은 OECD 국가 기준 높은 수준임. 즉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행정자료로 공적이전소득이 대체보완되면서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전체인구보다 크게 증가함. 2016년 이전 자료 혹은 가계동향으로 측정된 노인빈곤율의 경우, 일정부분 과대 측정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지만 빈곤한 노인의 비율은 2020년 대략 6%에 이름. 이들의 총자산은 다른 집단보다 총자산의 수준이 2배~4배 높았음. 이들은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노인비율이며, 이들이 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노인빈곤은 2020년 기준 3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안서연·한정림·왕승현. (2021). 고령노동과 노후소득보장수준이 빈곤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연구원(발간예정).

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s://meta.narastat.kr/에서 2022년 3월 2일 인출.

홍경준. (2011). 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2): 65-88

Fairlie, R. W. (2005). An extens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o logit and probit mode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0(4), 305-316.

Jann, B. (2008). A Stata implementat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Stata journal, 8(4), 453-479.

OECD. (2012). OECD Economic Survey Korea: Paris. OECD.

OECD. (2022).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dicator). doi: 10.1787/8a801325-en (Accessed on 07 June 2022)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4/6/index.action

저자 약력

• **안 서 연**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 고령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빈곤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2.
- 생애 노동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불안정 노동과 공적연금 보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4.
-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변화 연구: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1.
- 노인의 소득-자산 구성과 수준에 관한 연구: OECD 주요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13.

정책자료 2022-01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2023년 0월 일 인쇄
2023년 0월 일 발행

발행인 : 김 용 진
편집인 : 권 문 일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만성동)
TEL : 063-713-6776 FAX : 063-715-6564

ISBN 978-00-0000-000-0